

건설업 봄 사라져... 기업 체감경기 흑한

CBSI 4개월째 침체 상태 그쳐
미분양 폭탄·SOC예산 감축탄

건설사업자들의 건설 경기 체감도가 4개월째 침체 상태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 3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81.6에 불과했다. 전월(81.5)보다 단 0.1포인트 상승, 2017년 12월(80.1)을 시작으로 80선을 유지하고 있다.

CBSI는 일반 건설사업자의 체감 수준을 판단하는 지수로 기준선(100)을 밑돌수록 현재 경기를 비판하는 기업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저조한 회복세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3월에는 동절기 이후

발주량이 늘어 지수가 평균 3~4포인트가량 오르지만 올해는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친 것이다.

도의 경우 불어나는 미분양 물량이 주 요인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2월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총 4,636세대다. 이는 2010년 7월(4,741세대) 이후 최대치다. 정부의 SOC예산 감축 기조도 한 몫했다. 올해 도가 확보한 정부 SOC 예산은 9,501억원으로 2016년 3조2,633억원, 2017년 1조9,319억원 등 연이어 반토막 수준으로 깎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은 갈수록 쌓이는 상황에서 예산마저 줄어들어 공공사업 수주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jjong@

도내 신축 아파트 토목공사 불공정거래 제기

운반 담당 수도권 중장비 업체
잔토처리 맡기로 계약서 작성
이후 중장비업체 재하도급 논란
“공식 계약 진행 문제될 것 없다”

강원도내 한 신축아파트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체가 잔토처리를 지역 내 중장비업체에 재하도급을 주는 불공정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0년 입주를 앞둔 GS건설 춘

천파크자이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잔토처리 하도급을 받은 수도권 A건설업체가 운반만을 담당하는 수도권 B중장비업체에게 잔토처리까지 맡기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B업체가 또다시 춘천과 홍천지역 중장비업체를 고용해 사실상 재하도급을 줬다는 불공정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B업체는 지난해 진행된 춘천 이편한세상 한숲시티와 후평우미린뉴시티 토목공사 당시에도 춘천과 홍천지역 중장비업체 10여곳을 고용한 후 4억원 가량의 운반비 및 잔토처리비를 체불, 반발을 사왔다.

이 때문에 춘천과 홍천지역 중장비업

체들이 춘천파크자이 공사장 잔토처리를 전면 거부, 지난 11일부터 5일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해당 잔토처리는 임시방편으로 춘천 레고랜드 공사를 맡고 있는 건설사가 처리하면서 지난 16일부터 공사가 재개됐지만 해당 불공정거래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B업체가 23일부터 차에 흙을 싣는 비용인 상차비를 요구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또다시 지역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B업체가 이미 시공사인 GS건설로부터 상차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업체에게까지 요구할 경우 이중으로 상차비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당업체가 지역 중장비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잔토처리 업무를 지역업체가 맡아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재하도급이라고 할 수 있다”며 “여기에 B업체가 상차비를 이중으로 받으려고 해 지역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B건설업체 관계자는 “이전에 발생한 임금체불의 경우 현대표와 관련된 건이 아니며 지역업체 고용도 공식적인 계약이 진행된 재하도급이 아니라 문제될 것이 없다”며 “상차비와 관련해서는 사실 무근이다”고 말했다.

김도운 helpkim@kado.net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 9월 베일 벗는다

‘칸막이식’ 업역·업종 구조개편 공공사업 효율화 ‘투트랙’ 손질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액션플랜인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이 오는 9월 베일을 벗는다. ▶관련기사 3면

다음달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큰 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은 건설산업 구조 개편과 공공사업 효율화를 ‘투트랙’으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는다.

2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 마련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은 건설산업 구조 개편과 공공사업 효율화를 두 축으로 설정했다.

경직된 산업구조와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먼 공공사업의 비효율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설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과제로는 칸막이식 업역·업종 개편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을, 공공사업 효율화를 위해선 발주제도 변별력 강화, 공사원가 산정체

국토부, 전문가·업계·노동계 22명 구성된 ‘혁신위’ 가동

발주제도 변별력 강화 방안 적정공사비 산정체계도 논의

계 개선을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이들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국토부는 지난 20일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혁신위는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공공기관·노동계·업계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혁신위를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로 나누기 가동하는데, 전문위원회는 각 쟁점사항에 대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 안건을 최종 조율하고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혁신위를 통해 국토부는 업역·업종 개편 등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전문가에게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업계의 대안 제시와 전문가 중재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다양한 병폐를 유발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업 등록기준을 선진국과 같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도 다룰 계획이다.

발주제도의 변별력을 강화해 우량업체를 선별하고, 공공 인프라의 품질·안전 확보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적정공사비 산정체계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국토부는 혁신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손 차관은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혁신과 발주제도 변별력 강화 등은 전문 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해온 오랜 숙원”이라며 “건설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심정으로 구성된 혁신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로드맵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더 미루다간 미래 없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핵심”

뉴스포커스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 그릴 혁신위 본격가동

건설산업의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게 될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위원들은 성장 한계에 직면한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시간이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건설경기의 가파른 하향곡선이 불가피한 가운데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면서 혁신에 망설이거나 주저할 경우 건설산업의 미래는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혁신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복남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는 “건설산업이 맞닥뜨린 위기에 대응하려면 점진적

위원들 “시간이 없다” 한목소리

점진적 아닌 파괴적 혁신 추진

“반대 있더라도 강행” 강한 의지

도출된 해법 이행력 확보가 중요

인 개선은 의미가 없다”며 “그렇게 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말했다.

신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은

“합이 센 자에게 제값을 받지 못하다 보니, 일선 현장의 생산자인 약자들이 취약해지면서 결국 품질도 떨어지고 산재도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건설산업은 바로 옆이 절벽이어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혁신위에 참여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국가 경제를 선도하던 건설산업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건설산업의 후진성은 부인할 수 없게 됐다”면서 “건설산업의 혁신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원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건설산업 혁신의 방점을 둘 것을 예고했다. 혁신위가 다루게 될 핵심 과제들은 업역·업종 개편, 하도급 구조 개선, 발주제도 변별력 강화, 공사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이다.

하나같이 종합과 전문, 종합과 종합, 전문과 전문, 발주기관과 종합·전문 간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한 과제들이다. 지금까지도 이들 과제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이유다.

혁신위원들은 일부 반대의 목소리가 있더라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

면 해쳐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해왔던 혁신은 ‘파이썬’이 아니라, ‘머거리 전갱’이었다”며 “이제는 파이를 늘리고, 머거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건설시장을 향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반대가 있더라도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 전문위원은 “발주기관이 제값을 내 놓고, 시공능력이 우수한 건설사에 공사를 맡기면서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는 자동적으로 퇴출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거꾸로 가고 있는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게 혁신위의 큰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혁신위원들은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의 이행력 확보를 로드맵 성공의 관건으로 제시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되, 실전이 중요하다”면서 “실제 로드맵이 이행될 수 있어야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명단

구분	성명	소속
정부	손병석 (공동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일명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이성해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이복남 (공동 위원장)	서울대학교 건설환경 종합연구소 교수
전문가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현수	세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김성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
공공기관	박세원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김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강훈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
시민단체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단장
	정목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연맹(민노총) 위원장
노동계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한노총) 위원장
	정병준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구지영	대한전문건설협회 부회장
	이상복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부회장
업계	전상화	현대건설㈜ 상무
	소재철	우정환중건설 대표
	김재준	방림이앤씨㈜ 대표
	박종근	케이유디엔 대표
	성낙일	유유신 대표

‘박한 공사비’ 떠넘기는 발주기관 甲질 막는다

정병국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부당특약 강요때 이의신청 근거 마련
업계 “실효성 높일 방안 뒷받침돼야”

발주처가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건설사에 부당 특약을 강요하거나 자신들이 지불할 비용을 건설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병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발주처가 우월한 지위를 앞세워 부당한 특약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부당 특약 및 조건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으로 불이익을 받은 계약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발주처가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거나 내부지침을 적용해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하는 일이 적지 않게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공공기관은 설계변경 과정에서 신규 항목에 대해 내부 규정을 활용해 공사비를 일방적으로 깎고, 공사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늘어난 공사비 중 일부만 반영하

는 일이 많았다.

이와 함께 사업 인허가나 민원 해결 등 발주처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시공사에 떠넘기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건설사가 부담하게 하는 일도 있다.

정병국 의원실 측은 “정부나 주요 공기업이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당한 특약 강요 등으로 수주 건설사에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주 건설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값싼 자재를 사용하게 돼 부실 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비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는 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준공한 공공공사의 공사원가 실행률이 순공사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적자 공사 비율이 37.7%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공공공사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발주처의 부당 특약에 따른 공사비 삭감이나 비용 전가로 생기는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발주처의 갑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회복하기 위해 보다 실행력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자가 강요한 부당 특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의신청 제도가 단순 신청에 그치지 않게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